

# ‘김명수 인준’ 운명의 날...국민의당 선택은?

### 오늘 워포인트 본회의서 표결 與, 당력 총동원 대야 설득 한국당, 공개 반대 선언 국민의당, 찬반 혼재 여전 바른정당, 일각 찬성 기류

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투표  
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는  
긴장이 고조되고 있다.

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력을 총동원,  
대야 설득에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 
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선언해 표 결을  
예고했다. 캐스팅보트를 쥐고 국민의당은  
여전히 찬반이 혼재한 상태다. 또 바른정  
당 내에서도 일각에서 찬성 기류도 나타나  
고 있어 주목된다.

민주당은 사실상 소속 의원 전원이 투입  
돼 김 후보자가 사법독립과 개혁을 이뤄낼  
직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인준안 통과  
를 호소했다.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  
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  
자 인준을 위해 야당이 협조해 달라는 메  
시지를 던지며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  
언이나 표현은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. 민  
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비공개 의원총  
회를 열고 결의를 다졌다.

특히 추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 
21일 오전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 
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 
미칠지 주목된다.

이와 함께 전날에 이어 청와대 정무라인  
과 법원행정처도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움직  
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출국 전에  
국민의당 안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 
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 
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.



“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합니다”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(오른쪽 두번째)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(맨 왼쪽)이 정회된 후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(맨 오른쪽)와 대화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반면, 자유한국당은 부결을 위해 총력을  
기울였다. 지난 19일 소속 의원들에게 분  
회 표결에 대비한 ‘비상 대기령’을 내린  
데 이어 20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‘당론  
반대’를 공식 확정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.  
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 
김 후보자에 대해 “동성애·동성혼에 대한  
앞으로 법적 가치관, 종교적 가치관을 혼  
들 수 있는, 송두리째 뒤덮을 수 있는 위험  
성을 가진 인물”이라고 표현하면서 “전원  
이 참석해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호  
소하고,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친소관계를  
통해 설득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 드  
린다”고 말했다.

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  
당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내부에서 찬  
성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사실상 반대  
당론을 채택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.  
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 
동성애 옹호 입장 등을 문제 삼아 그가 사  
법부 최고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  
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. 하지만, 여야가  
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 
관계없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 
‘워포인트 분회’를 열기로 합의하자 전  
체 의원 20명 가운데 일부가 찬성 쪽으로  
급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. 복수의 당 관  
계자에 따르면 2~3명 정도가 찬성 입장  
인 것으로 전해졌다.

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“당론으로 (반  
대)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유투표를 하  
기로 했다”면서도 “그러나 여전히 반대가 다  
수인 것이 사실”이라고 전했다.  
이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  
택이 표결 결과를 좌우할 상황이다. 자유  
투표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.  
당 관계자는 “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결  
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”이라며 “표심을  
알기 어렵다”고 말했다.  
국회 의석수 기준 표결에서 과반을 확보  
하기 위해선 민주당 의석 121석에 김 후보  
자에 호의적인 정의당(6석)과 새민중정당  
(2석),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한 130석 외에  
20석이 더 필요하다. /박지경기자 jkpark@

## 軍 영창 폐지·기밀 유출자 연금 박탈

### 국방위 개정안 의결

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 
열어 군(軍)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 
개정안과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 
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 
의결했다. 국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 
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 
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 
3건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.  
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병사의 징  
계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,  
휴가 단축, 군기 교육, 근신 및 견책 등  
으로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. 군기  
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  
간이 늘어난다.

승영무 장관은 회의에서 “군 인권 개  
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”이라  
며 “잘못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

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 
방법을 검토하겠다”고 말했다.

군인사법 개정안에는 징급 예정자가  
전사·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지급하도  
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 
이를 2001년 9월 이후 전사·순직한 사  
람부터 소급 적용하고, 전광상상사위  
원회의 정원과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  
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.

국방위는 또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 
한국당 김진태 장제원 의원, 국민의당  
송기서 정인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  
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 
대안도 의결했다. 이 법안은 금품을 수  
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 
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 
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  
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  
도록 규정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

## 국민의당·바른정당 정책 연대 ‘시동’

### 국민통합포럼 출범...선거제 개편·탈원전 등 정부 견제

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 
‘국민통합포럼’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 
조찬 모임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. 이 모  
임 의원들은 앞으로 국민 통합 활동은  
물론 선거구제 개편이나 탈원전 등에  
대한 정책연대나 입법공조에 나선다는  
생각이다.

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 
조찬에는 포럼을 주도한 국민의당 이연  
주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을 비  
롯해 국민의당에서 황주홍·김수민·김  
중로·박준영·신용현·정인화·최도자  
의원, 바른정당에서 강길부·김세연·이  
학재·박인숙·오신환·하태경·홍철호  
(선수·가나다순) 의원 등이 참석했다.

이들은 우선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  
한 선거제 개혁, 규제프리존법·부정청  
탁금지법(김영란법)·검찰 개혁법·방  
송법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.

이연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“두 당이  
패권정치와 권력 사유화에 저항해 생긴  
정당인 만큼 창당 정신을 함께 되살리  
고 국민을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모였  
다”고 말했다.

정운천 의원은 “자유한국당에서도  
패권세력 청산이 안 됐지만, 문재인 정  
부도 패권세력 정치로 가는 것 같다. 진  
정한 민주주의 시대 구현에 힘을 모아  
야 할 때”라고 주장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# 민주 혁신위, 대의원 추천권 갖는 ‘당원 모임’ 도입 제안

### 1차 혁신안 발표...당원 투표 의무화·평생당원제 등

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  
원회(정발위)가 20일 대의원 추천권을 보  
장받는 자발적 관리당원 모임인 ‘기초협의  
회’(가칭)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, 결과가  
주목된다.

2명 이상의 관리당원이 모이면 ‘기초위  
원회’라는 이름으로 각 시·도당에 등록할  
수 있고 대의원 추천권도 보장받을 수 있  
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 
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.

기초위원회가 도입되면 당의 조직 문화  
에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, 내년

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  
다. 하지만 조직화된 평당원 일부가 당의  
권력구조, 이념적 지향 등에서 독점력을  
발휘하는 등 결과적으로 당내 세력 간의  
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크다. 일  
각에서는 기초위원회 도입으로 당내 친문  
당원들의 전국적 세력화가 이뤄지지 않  
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.

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의 보고 및 최  
고위 간담회를 거쳐 기초위원회 도입을 골  
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. 정발위  
는 우선 기존 하향식으로 운영된 당 조직

을 바꿔 당원 스스로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 
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협의회를 도  
입하기로 했다. 기초협의회는 2명 이상의  
관리당원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으며 일정  
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과 지역  
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도 주는 방향으  
로 추진된다.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  
위원회는 유지하되 전국에 5천 개 기초협  
의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다.

이와 함께 정발위는 선출직 당직자에 대  
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, 투표권·  
발안권·토론권 등 당원들의 ‘4대 권리’를  
제도화하기로 했다. 당의 합당과 해산은  
물론 당 강령을 제정하고 재개정할 때 모

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 
된다. 당의 중차대한 문제는 당원 의사를  
물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.

정발위는 평생당원제 도입 방안도 제시  
했다.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관리당원에  
게 평생당원의 지위를 부여해 선출직이나  
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 
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 
준다는 것이다.

하지만 정발위와 최고위원회의의 간담회  
에서는 기초협의회, 평생당원제 등의 명  
칭이나 대의원 추천권 등을 둘러싸고 이  
견이 제기되면서 최종 인준까지 상당한 진  
통을 예고했다. /임동욱기자 tuim@

## 정가라운지

## 정인화 “4억 들인 농진청 앱, 하루 이용 14명”

### “앱 개발·부실관리 개선용”

국민의당 정인화 의원(광양·곡성·구  
례)은 20일 “농촌진흥청이 4억1000만  
원을 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애플  
리케이션(일명 앱·App)이 제작과 관리  
의 총체적 부실로 이용자에게 철저하게  
외면당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정 의원은 “이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 
제출받은 ‘농촌진흥청 관리 앱 현황’  
자료를 분석한 결과, 농촌진흥청은 4억  
1954만원을 들여 14개의 스마트폰 앱을  
개발·운영 중에 있는데, 14개 앱 전체의  
하루 평균 접속자는 13.2명으로 나타났  
다”며 이 같이 주장했다.



정 의원은 그러먼  
서 “1억1400만원을  
들여 만든 ‘농촌체  
합’ 앱은 하루 평균  
4.1명이 접속하고,  
‘한우체형스캐너’,  
‘매일매일건강개  
입’, ‘아기외박’, ‘쌀만들기’ 등의 앱도 하  
루 평균 3명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. 역대  
의 세금을 들여 만든 앱이 이용자에게  
철저히 외면받는 ‘유령 앱’”이라며 “농  
산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앱 개발은  
바람직하나 무분별한 앱개발과 부실한  
관리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”며 대책마  
련을 촉구했다. /김형호기자 khh@

**Aroma Life**  
www.aroma-life.co.kr

| ‘건강’과 ‘아름다움’을 모두 잡은 |

#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**아로마라이프**

-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
-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
-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(별단면육각형)
- 특수 물질가공(원적외선, 음이온 방출)

(주)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**1588-2219**

**아모리온**  
브라+슈트+거들  
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

**아모리온 롱바디**  
브라+슈트+거들+레깅스  
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

**아실리바디슈트**  
블랙은사 바디슈트의  
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

**비비드아모르**  
러닝+팬츠 일체형  
남성용 슈트